

'이재명 펀드' 모금 전 '문재인 펀드' 실패 분석을

광화문·부



김 신 영

경제부 차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는 주력 상품은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민간이 함께 모은 돈을 혁신 분야에 투자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애초 5년간 100조원 규모였는데 15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이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했다. 같은 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련 행사가 열렸다.

국민성장펀드는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뉴딜펀드의 확장판으로 보인다. 구조가 흡사하다. 정부·금융·증권·기업 그리고 국민이 돈을 대서 AI·반도체·로봇 같은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수익을 나누겠다고 설명한다. 5년 전 보도 자료를 보니 유사한 문구가 적잖다.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겠다거나, 정부 자금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펀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한다. 손실이 나면 정부가 대부분을 떠안겠다는 내용(후순위 출자·보강)도 비슷하게 들어 있다.

뉴딜펀드도 5년 전 출시 때는 요란했다. 지난주 행사처럼, 관계 장관과 재계·금융계 대표를 모아놓고 대통령이 선포식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개 펀드에 1000만원씩 넣었다. 정권이 지원한다고 인기 몰이를 해 개

인 투자자용 펀드는 출시 첫날 '완판' 됐다. 정부는 첫해 목표한 4조원보다 많은 5조6000억원을 모았다고 자랑했다.

이 펀드의 목표 규모는 5년간 20조 원, 기간은 올해까지였다. 하지만 결산 보고회 소식은 없다. 다른 주식형 펀드보다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초기 보도가 나오면서 인기는 진작에 식었다. 2022년 정권 교체 후엔 '뉴딜'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여기저기 생긴 부처 및 금융사 내 뉴딜 조직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간판을 내렸다.

뉴딜펀드에 관한 종합적인 실적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투자한

지 않을까.

불투명성은 뉴딜펀드의 또 다른 약점이었다. 출시 한 해 뒤 펀드를 판자산운용사에 투자한 기업이 어딘지 취재한 기억이 난다. 담당자는 "돈 모아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간접 형식이라 최종 투자처는 모른다"고 했다. 지적이 일자 당시 금융위원회는 "운용 보고서에 구체적 투자처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공시 자료에서 최종 투자처는 여전히 찾을 길이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행사 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마지막 발언을 맡겼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40%면 지난해 전체 지방교부세와 맞먹는 60조원이다. 뉴딜펀드도 35%는 지방에 썼다고 홍보했다. 글로벌 증권사 CLSA는 당시 '문 대통령, 펀드매니저로 데뷔'란 제목의 뉴딜펀드 분석 보고서를 내고 "펀드로 표를 얻고자 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펀드가 지방 '표심'에 동원되는 일이 반복되려나 싶다.

뉴딜펀드와 다른 국민성장펀드의 특징은 150조원이라는 큰 몸집이다. 지난해 전체 벤처 투자 자금이 12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만 시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집권당이 만들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관계 펀드를 키워 다시 내놓으려면, 면밀한 실패 분석은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나. 탄핵 대상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 환승 재판을 거론하면서 "사법거래가 있었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국무 법사위원장도 폐이스북에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라는 것도 이 대통령 재임 중 대법원 구성을 친민주당 우위로 변경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법조계는 비판하고 있다.

정권이 사법부를 행정부 부처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자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을 놀립기만 하다.

온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 대법관 증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권력에 의한 일방적 사법제도 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이렇게 입법·사법부가 충돌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험이나"고 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회 우위를 말했다.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이유를 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져 "입장이 없다"고 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겹박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빌상이 놀립기만 하다.

노란봉투법 강행하며 외치는 '규제 완화' 허망하게 들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하기 너무 힘들 것이다. 규제 합리화가 구호로 끝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내세우는 단골 메뉴였지만 제대로 된 적은 없었다. 특히 이번엔 노란봉투법과 같은 심각한 규제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 정부가 '규제 개혁'을 언급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가 원정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기업 입장에서 최악의 규제다. 이날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게 한 '노동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지난치기 처벌 위주의 규제라고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뀌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로 불어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성장하면 보상이 아니라 벌칙을 주는 규

제 왕국이란 얘기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려 하겠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과 '트럼프 관세'만 해도 버거운 우리 기업들이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다. 올해 우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역전당한 가장 큰 이유도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이미 2023년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투자와 고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조차 거부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거 '타다'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왜 규제가 양산되고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잘 없어지지 않는지를 잘 보여줬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표만 의식해 숫자가 많은 쪽 편을 들면서 규제를 만들고 지키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태도가 바뀔 기미가 전혀 없는데 정부가 회의를 열어 '규제 혁신'을 외친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많은 기업인은 정부의 규제 개혁 회의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면서 무슨 규제 개혁이냐는 항변일 것이다.

교육감들 매표 행위 재원은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경기교육청이 최근 도내 모든 고3 학생에게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입했다.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을 따는 데 쓰라고 준다는데 한 해 예산이 372억원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서점이나 문구점 등에서 쓸 수 있는 1인당 67만~97만원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올해 예산이 414억원, 내년엔 600억원으로 치솟는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들이 수백억 원씩 현금 살포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규모는 5991억 원으로 4년 전의 2배로 늘었다. 5년간 전국 교육청이 지급한 현금을 합하면 2조원이 넘는다.

특히 올해 고3 학생들은 내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고3만을 지목해 현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유권자인 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육 본질과

관계없는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권자에게 현금을 뿌리는 분야가 정치권도 아니고 교육계나 놀라울 뿐이다.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다.

교육감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받는 지방교육교부금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이 예산이 올해 72조3000억원에 이른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늘어나니 돈 쓸 곳을 못 찾는 지경이다. 그러나 죄의식 없이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이다. 반면 대학들은 16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교육교부금을 대학과 나눠 쓰면 모두에게 좋을 텐데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손대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를 개선하면 지방선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맨해튼에도 밀밭이 있었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9]

1982년 여름, 미국 맨해튼 남부에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밀밭이 나타났다. 월스트리트를 등지고 자유의 여신상을 마주하고 있는 땅이다. 원래 이곳은 1973년 완공한 세계무역센터를 세우며 파낸 흙과 폐자재로 허드슨강 하구를 메워 조성한 매립지였다. 헝가리 출신 예술가 애그네스 디니스(Agnes Denes·1931~)는 1982년 봄 이 황량한 땅에 밀을 심었다.

죽구장 하나 반 넓이에 트럭으로 흙을 부었다. 그다음으로 쓰레기와 돌을 걷어내고 이랑을 수백 줄 만들어 씨앗을 뿐인 것은 온전히 사람 손이었다. 디니스와 자원봉사자들은 석 달 동안 잡초를 뽑고 물을 대 밭을 돌렸다. 마

침내 8월 16일 밀 455kg을 수확했다.

같은 면적의 농지에서 기대할 양에는 턱없이 못 미쳤다. 하지만 매립지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기적 같은 수확이었다.

밀짚은 뉴욕 경찰 기마대의 말 사료가 됐다. 수확한 밀은 미네소타 미술관이 주관한 '세계 기아 종식을 위한 국제 미술전'에 출품됐다. 전시는 세계 도시 28곳을 순회했고, 밀은 도시 곳곳에 조금씩 심었다.

밀밭은 그 여름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맨해튼의 마지막 금싸리 땅'이라고 한 그곳은 지금 고급 주거·상업 지구가 됐다. 작가는 작품명에 '대결'을 붙였지만, 값어치가 전문 학적인 부동산 위에서 고작 밀을 키우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애그네스 디니스, 밀밭-대결, 1982년, 면적 약 8000㎡, 뉴욕 맨해튼.

는 건 처음부터 되지 않을 도전이었다. 지금 사진을 다시 보면 비극 속에서 무너져 내린 세계무역센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풍성했던 밀밭에서 퍼져나간 씨앗은 여전히 어딘가에 뿐 리를 내리고 있을지 모른다. 생명을 품은 밀알은 눈앞에서 사라졌더라도 어쩌면 다른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밀밭은 그 여름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애그네스 디니스는 밀밭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애그